

제 7 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4. 재난재해 관리
5. 토지 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토지의 가치 창출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7. 공동혁신도시 건설

제7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 활성화

가. 주요 SOC시설의 획기적 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말 88올림픽 고속도로 및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고창~장성, 2008년에는 무안~광주간을 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 공사 중에 있다. 또 광주~완도간은 '05.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09. 12월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도 4차로 개설사업은 국도 77호선 등 미개통 구간과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7지구와 유치~이양간 등 지방도 34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별로 군도·농어촌도로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395>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km, %)

도로별	구 분	2007		2008		2009	
		연 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112	68.6	10,181	69.8	10,181	69.9
고속도로		208.3	100	267	100	267	100
국 도		2,015	94.4	2,026	94.6	2,026	94.7
지 방 도		2,293.4	70.1	2,295	70.8	2,296	70.5
시 군 도		5,596.2	60.8	5,592	59.1	5,592	59.1

※ 당해연도 12. 31 기준

<표 2-396> 사업추진 실적(2009년)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235	261.4	16,912
고속도로	3	35.5	7,397
일반국도	36	33.7	4,21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3	9.0	2,571
국가지원지방도	9	9.6	878
지방도	22	13.6	745
군도	55	59.0	375
농어촌도로	97	101.0	733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도로공항공계획담당 양종연, 담당자 이종현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 철도신설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98. 12월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 완료 및 경제성(B/C 1.04)이 인정되어 2003. 12월 2개 공구 17.5km가 턴키공사로 착공되었고 잔여 5개 공구 62.0km는 기타공사로 발주하였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목포간 수송거리가 153.0km에서 79.5km로 73.5km가 단축되고 수송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되어 전남 서남부지역과 동부 지역간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352km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도

'99년말 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다.

2003.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2005.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 기본계획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I 단계 구간인 오송~광주 구간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II 단계 구간인 광주~목포 구간은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다.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신리~동순천간 122.6km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88.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9. 11월 1단계 공사(병목구간 64.3km)를 착수하여 '99. 9월 완공 개통하였고, 2단계구간(기타 구간 58.3km)도 '98. 6월 착공 후 완료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01. 12~'04.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05. 7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면 KTX 운행은 물론 수송능력 향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여수간 40.0km에 대해서는 3개 공구로 분할, 성산~신풍간 1공구와 여천~여수간 3공구는 '02년 턴키공사로 발주되었고, 신풍~여천간 2공구는 '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였으며, '07년 전철화 설계 후 2011년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현재 83%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도로공항공계획담당 양종연, 담당자 이광남

(3) 공항 건설

1) 여수공항 확장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 울촌 1·2산단 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7.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98. 8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99년까지 1,022 필지에 대한 보상비 4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9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신설 활주로와 관제탑을 완공하고 2005년 11월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완공, 동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공항 확장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등과 육상교통이 불편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항공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활주로 추가확장이 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한려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 건설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98.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98. 12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98. 12월에 착공, '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본 국제공항 완공으로 호남권 거점항공수요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중 교류확대, 서남권 투자활성화, 농산물 수출 여건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도로공항계획담당 류병담, 담당자 박철원

(4)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12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호남복합물류(주)를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000년 실시설계와 2002년 용지매수를 완료한 후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물류체계를 단순화 내지 집약화 시킴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방세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기획담당 김태형, 담당자 홍양현

나. 건설업체 등록관리

2009. 12. 31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291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506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397>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추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일 반	993(증1.124%)	976(증1.215%)	1,291(증6.3%)
전 문	2,653(감3.445%)	2,682(3.943%)	4,506(증14.3%)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설업체 자진반납 등으로

지난 '99년 등록제로 전환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건설업체가 2002년 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F1코리아 그랑프리, 2010 여수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 증가로 인한 부실시공 또는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어 업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등을 강구한다면 한층 더 성숙된 건설산업 발전과 부실공사 예방이 기대된다.

<표 2-398> 2009년도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295업체	23	212	60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기준 미충족에 따른 등록말소가 23개업체, 영업정지 212개 업체(등록기준 미달 등)이며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통보 등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60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지역계획담당 민상기, 담당자 윤두환

다. 건설기계관리

도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시정 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의 1/3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99>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22,746	164	8,730	1,013	6,286	3,440	591
모터 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24	271	1,443	252	2	32	6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23	211	168	8	1	10	71

<표 2-400>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 : 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소계	일반	개별			
606	429	256	173	101	39	37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병래

1-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권 287.11km²를 '73. 1. 17일 지정관리 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01. 5. 3 나주 학림마을 등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 0.045km²를 해제하고 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 10.40km²를 2004년 말 해제하였으며, '06. 12월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성진원·남면일원 0.807km²를 해제하고 2009년까지 해제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4.128km²를 해제하여 '09년 12월말 현재 271.730km²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401>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단위 : km², 가구, 명)

구 분	시 군	계	나 주	담 양	화 순	장 성
	면 적	당 초	287.11	42.9	115.18	41.70
현 재		271.73	39.536	108.677	41.230	82.287
가 구	당 초	10,127	2,331	4,415	354	3,027
	현 재	363	36	180	13	134
인 구	당 초	26,196	5,682	11,602	965	7,947
	현 재	1,820	229	799	37	655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도시계획담당 김용철, 담당자 이범재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단속요원 84명, 단속장비 44대 등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표석 1,807개소, 초소 22개소, 입간판 11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 등은 집단취락이 해제됨에 따라 2007년까지 665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표석 이전 및 보수를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09년까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나주시 등 4개 시군에 국비 367억원과 시군비 157억원 등 총 524억원을 투입 하여 마을진입도로정비 등 20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 국토부, 도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철, 담당자 이범재

1-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가. 효율적인 택지개발 사업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3종의 사업으로 총 74지구 35,515천 m^2 , 투자사업비는 1조1천억 규모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업 17지구, 구획정리사업 34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 구분하면, 사업완료가 59지구 20,386천 m^2 , 추진중인 사업은 18지구이며 추진 중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4지구, 도시개발사업 9지구, 구획정리사업 5지구로서 주택용지 수용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김운형

나.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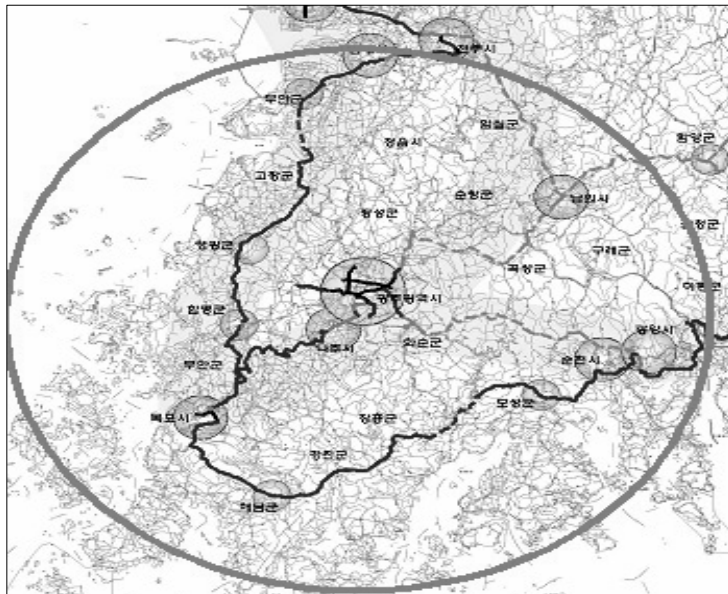
(1) 자전거 도로사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심각

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올해부터 추진중인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10~’19)』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년도 1차 사업으로 목포 등 4개 지역 11.6km구간에 걸쳐 71.5억원을 투입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연계하여 섬진강 및 영산강변에 총 연장 288km구간에 23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관련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현재 “기본계획 구상”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중인 사업계획(안)에는 우리 도 1차 사업으로(‘10~’19) 영광, 함평, 나주, 무안, 목포,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순천, 광양 등 도내 11개 지역 307km구간 걸쳐 약 1,9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최 환

다. 국토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1) 도시계획분야

'03. 1. 1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함평·장성·해남·영암·무안군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목포·여수·순천시와 곡성·구례·고흥·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신안 등 16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2010년 상반기까지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로 개편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투자유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토지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25회를 개최하여 총 120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였다.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에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km²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것으로 집단취락 209개소 10.89km²와 일반 조정가능지역 33개소 9km² 지역현안사업 2개소 0.83km²가 반영되었으며,

광역시설로는 광주의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km²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 시키고 전주 여수 간 고속도로와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3개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km²을 2025년 9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하였으며

면급 도시 내 사유토지로서 급경사지에 결정되어 사실상 조성이 어려운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시군 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또는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 검토하였고

‘09년 12월말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37천m²에 739억원이 청구되어 35천m²를 563억 원을 투입 매수하였으며 잔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매수여부 결정 후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철, 담당자 최순철

1-4. 전남의 산업기반 현황

가.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여수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에 산업 생산성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이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 체수의 8.0%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30.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치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 단순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중화학 공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양만권은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화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단이 활성화되어,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가 완공되고 대불산단~삼호산단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선 북

선화(송정~목포), 무안 국제공항 건설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주변 발전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도 있어 낙후된 이 지역이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 전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 광주시에 비해 지가가 싸고, 광주광역시 등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나. 산업단지조성 현황

전남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 여수오천,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국가산업 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8시군에 25개소가 있다.

<표 2-402> 전남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08. 4분기)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 정 면 적	분 양 대 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분 양	미분양	분양률 (%)	
합 계	30개소	244,052	78,132	67,253	66,338	915	98.6	
국가산단	5개소	173,925	65,069	56,709	56,264	445	99.2	
영 암	대 불	20,887	8,269	8,269	7,824	445	94.6	
광 양	광 양	96,405	26,167	20,830	20,830	-	100	
여 수	여 수	50,253	25,583	24,168	24,168	-	100	
"	삼일비축	4,155	3,442	3,442	3,442	-	100	
합 평	빛 그 린	2,225	1,608				-	

시 군	산 업 단 지 명	지 정 면 적	분 양 대 상	분 양 현 황				비 고
				분양공고	분 양	미분양	분양률 (%)	
일반산단	25개소	70,127	13,063	10,544	10,074	470	95.5	
목 포	삼 진	271	231	231	231	-	100	
여 수	오 천	222	131	131	131	-	100	
순 천	순 천	583	439	439	439	-	100	
나 주	문 평	323	250	250	250	-	100	
영 암	삼 호	2,971	2,427	2,427	2,427	-	100	
여 수	울 촌 1	9,193	6,077	4,716	4,451	265	94.4	
"	울 촌 2	9,570	-	-	-	-	-	
"	울 촌 3	9,762	-	-	-	-	-	
순 천	해 룡	987	663	209	178	31	85.2	
나 주	나 주	549	417	417	243	174	58.2	
"	미 래	2,954	-	-	-	-	-	
광 양	성 황	1,017	-	-	-	-	-	
"	황 금	2,590	-	-	-	-	-	
"	신 금	464	-	-	-	-	-	
"	익 신	478	-	-	-	-	-	
화 순	화 순	755	399	148	148	-	100	
진 도	군 내	685	532	532	532	-	100	
해 남	화 원	2,083	1,497	1,044	1,044	-	100	
장 성	나 노	902	-	-	-	-	-	
고 흥	도 양	2,758	-	-	-	-	-	
장 흥	해 당	2,920	-	-	-	-	-	
강 진	성 전	1,484	-	-	-	-	-	
목 포	대 양	1,586	-	-	-	-	-	
영 광	대 마	1,641	-	-	-	-	-	
신 안	압 해	13,379						

1-5. 산업단지 조성

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 주도로 건의하여 국



토연구원에서 수립한 개발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4.08km² (123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069억원을 투입, 생물·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 부품 등을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 2009. 9. 3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내생적·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주거용지 2.6%, 산업시설용지 63.2%, 지원시설용지 2.2%, 물류유통시설 1.0%, 공공시설용지 31%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조성 완료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 7천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산단조성담당 박철웅, 담당자 김삼수

나.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에서는 투자유치 총력의 해를 맞아 전남 서북부권에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노력한 결과 2009년 4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주)탑건설, (주)KCC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정(MOA)를 체결하였고, 영광군과 민간개발업체, 금융권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여, 2009. 12. 4일 착공식에 앞서 지방 산업단지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약속하였다.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세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1,641천㎡(50만평)에 총 사업비 2,0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음료식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2,32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19억원의 임금유발 효과, 1,175명의 고용유발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T&T 전기자동차기업(5만평)이 지난 3월에 대마산단 현지에서 착공식을 하였고, 중앙이엔지(냉·난방 장치 제조)와 MOU가 체결되는 등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준공 전 부지가 부분적으로 조성되는 대로 선 분양할 계획이다.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 12. 4일 착공하여 2011년말까지 조성 완료계획이며, 2010년부터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분양이 가능

하므로 도내 산업용지 공급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며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비교 우위를 갖춘 입지경쟁력을 확보하여 서북부권의 산업발전 신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산단조성담당 박철웅, 담당자 박필영

다. 신안 조선산업단지 조성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는 신안군 압해면 일원 13,379천㎡(약 405만평)규모에 총 사업비 약 2조 6,0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북측(가룡리, 북룡리 일원)에는 8,866천㎡규모의 산업단지과 남측(장감리, 신장리 일원)에 4,513천㎡의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에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차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는 전라남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고, 이와 함께 연관기업을 육성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또한 정부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맞추어 전남도 5GW WIND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종을 유치하여 기업 수요의 부응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전남권에 약 14,700인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 64.4%,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 4.7%, 주택건설용지 2.4%, 공공시설용지 28.5%로 구성되며, 특히, 공원 및 녹지 비율을 15.4%로 법정 비율보다 훨씬 높게 확보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

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단지의 배후단지는 신안군 청사의 이전을 감안한 공간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내 종사자 수용, 기존 취락지역의 이주자 수용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까지 부여하였다. 개발계획은 주택건설용지 27.6%, 상업시설용지 6.0%, 공공시설 66.4%로 구성되며, 이 중 공원 및 녹지는 25.2%로 법정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확보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를 최대한 도모 하므로써 생산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산단조성담당 박철웅, 담당자 임용래

1-6.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09년 말 까지 21개 시·군 49개 단지(8,758천㎡)를 지정하여 38개 단지를 조성완료 하였고 11개 단지는 보상 및 조성 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미만 32개소, 165천㎡이상~331천㎡미만 14개소, 331천㎡이상 3개소로 331천㎡미만이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로 530천㎡이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이 4개 단지 1,004천㎡로 가장 넓고 가장 적은 면적은 진도군이 1개 단지 94천㎡이다.

그리고 2009년 말 보상 및 조성중인 11개 농공단지 중 9개 단지(무안청계 2, 담양 에코-하이테크, 장성동화 전자종합, 고흥 동강, 화순 쌍옥, 보성 조성, 강진 칠량, 구례 용방, 나주 노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개 단지(영광 칠곡, 신안 지도)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중에 있다.

신규 농공단지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03>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2009. 12월말 기준)

구 분	소 계	'84~'93	'94~'97	'98~'05	2006	2007	2008	2009
단 지 수	49	33	2	5	1	1	2	5
면적(천㎡)	8,758	5,837	373	1,186	283	70	285	724

나. 분양현황

2009. 12월 현재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38개 단지의 분양율은(조성중인 11개단지 제외) 99%이며 4개 농공단지(화순 이양, 완도 완도, 완도 죽청, 진도 고군)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농공단지 49개 단지 산업용지는 6,891천㎡로서, 분양대상면적 6,425천㎡중 5,838천㎡가 분양되어 전체분양율은 90.8%이며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21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04> 농공단지 분양 현황

(2009.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 양 현 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대상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단지	49개단지 8,758	38개단지 6,891	6,425	5,838	587	90.8	221

1-7.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

가. 자금지원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금난이므로

이의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리 4.79%(변동가능),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연리 4.79%(변동가능),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대체입주 촉진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촉진 및 장기 미분양부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도에 1개반 2명, 시군 20개반 40명 총 21개반 42명으로 구성된 휴·폐업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 촉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 도 농공단지 협의체 구성·운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협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행정기관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전담기구인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를 2004. 12. 2 광역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결성하였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는 농공단지가 있는 20개시군의 농공단지 협의회 대표 및 도 경제과학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 22명의 당연직 회원과 중진공, 전남TP, 대학교 등에서 6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28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지역개발담당 박철웅, 담당자 정인화

1-8.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지정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

형,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도농 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에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 지역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위 3가지 유형 중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이 보장되는 개발형태는 낙후지역형으로 지난 '09. 6. 12에는 정부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정지원 및 국가지원사업으로 재 분류되어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개발촉진지역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405>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도서종합개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1차년도에 신안·완도, 2차년도에 곡성·구례, 3차년도에 장흥·진도, 4차년도에 보성·영광, 5차년도에 화순·강진, 6차년도에 장성지역이 연차적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3차~6차 지역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06>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지 정 적 면 적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1차지구	신안·완도	180km ²	완도~신지, 암태~팔금연륙(연도)교 등 3개 사업	1996~2008	1,390
2차지구	곡성·구례	234km ²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 등 12개 사업	1997~2008	3,367
3차지구	장흥·진도	210km ²	회진~용산간도로 개설 사업 등 23개 사업	1999~2008	2,404
4차지구	보성·영광	240km ²	금천~옥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	2002~2007	1,733
5차지구	화순·강진	238km ²	화순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개 사업	2002~2010	1,333
6차지구	장성	78km ²	홍길동 테마파크 등 20개 사업	2008~2017	10,229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성군은 관련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고흥군, 함평군, 무안군에서도 금년 중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의 감세혜택이 주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촉진지구 내 중소기업 입주시 세제혜택 내용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4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64조)
-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제277조)

앞으로 도 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최 환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2-1. 지방도로 유지관리 정비

2004년 425억원 2005년 174억원 2006년 178억원 2007년 158억원 2008년 160억원 2009년 274억원 등 연차적인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파보수 5,812km, 미끄럼방지시설 및 덧씌우기 100km, 사리부설 34km, 교량보수 22개소, 차선도색 328km, 도로표지판 정비 123개소, 굴곡 위험도로 17개소를 정비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병하,
도로보수과장 고덕일, 보수담당 문인기

2-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가. 벽지 및 오지·도서 교통지원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 벽지 및 오지·도서가 많고 농어촌버스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표 2-407> 연도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 영 버 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정부예산	우리 도 예산	지원대수	지원노선수	손실보상금
2003	540	-	30	395	4,219
2004	360	-	20	407	4,300
2005	342	-	19	412	4,232
2006	339	-	22	428	6,332
2007	457	-	25	502	6,407
2008	543	-	30	530	8,408
2009	502	-	28	623	10,082

이러한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놓여
 촌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 하였
 으며, 이용객 감소로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벽지 및 오지·도서지역 주
 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근교

나.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차 운송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331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연
 수원의 운영비 550백만원을 보조하였다.

<표 2-408>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20,169	18,710	18,397	18,444	18,180	20,331
신규채용자	1,253	1,167	1,014	1,071	989	1,044
보 수 교 육	18,916	17,543	17,383	17,373	17,191	19,287

<표 2-409> 연도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80	400	550	550	600	750

2-3. 교통체계관리 개선

우리 도의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은 저비용 투자로 단기적인 교통편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교체·신설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신호기 5,409개소, 교통안전표지 8,261, 노면표지 6,728, 보행자신호등 14, 잔여시간 표시기 259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02개소를 교체 신설하였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 101개소 등을 대폭 정비·확충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2-4. 선진 운송질서 확립

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6%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483명에서 497명(2.9%)으로 증가 하였다.

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매월 4일 도와 시·군 ,경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군 반상회,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위반자 및 운전면허 응시자교육, 836개 초등학교에 대해, 녹

색 어머니회 운영,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였다.

<표 2-410>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09	11,309	497	19,273
2008	10,468	483	17,953
2007	10,591	534	18,087
2006	10,497	508	17,949
2005	10,373	533	17,178
2004	10,923	579	17,967
2003	11,919	571	19,119
2002	11,150	636	16,927

※ 2008년도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 1.2% 감소, 사망자수는 9.6% 감소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나.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교통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공무원도 증원 시켰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 13,031건, 무면허 5,361건, 신호위반 71,162건, 과속 552,000건, 안전운전 3,617건, 안전띠 27,295건, 중앙선 침범 1,150건 등을 단속 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최태근,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 추진배경 및 방향

지난 수십년간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지역개발로 개성없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농산어촌은 산업기반구축 미흡과 심화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이 아닌 지자체·지역주민·지역전문가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적 파트너쉽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개발이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시(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개발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비가시(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Making a great place to live)란?

- 각각의 지역들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 공간의 질을 재창조하는 「21세기 커뮤니티 운동」임
-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획일적으로 개발하고, 중앙 집권적인 기획에 의한 위로부터의 지역개발 방식인데 반해,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 원리에 의해 주민이 주도하여 개성과 특성을 살린 아래로부터의 지역개발 전략임
- **3대 핵심사업**
 - 대상지역의 마을공간을 종합적으로 재창조(H/W+S/W)
 - 대상지역의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주택 등 6대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H/W+S/W)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휴먼웨어)

나. 추진절차

- ①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군 → 도 → 중앙)
- ② 공모사업 선정(행정안전부)
- ③ 기본계획 수립·제출(시군 → 도 → 중앙)
- ④ 과제별 사업추진(기초자치단체) : 4대과제
 - 공간의 질 제고 : 마스터플랜 용역(행정안전부에 착수·중간 완료 보고 및 컨설팅 실시) ⇒ 실시설계 ⇒ 시공
 - 3대과제(공간의 질 제고 제외)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필요시 세부시행계획 수립 또는 용역 후 추진가능

다. 지원실적

- '07~'09 국가지정시범지역 : 총 155억원(지역별 22억원 인센티브1억원)
 - 각종 사업 패키지 지원 22억원 지원(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 국비인센티브 지원 1억원(장흥 0.5, 완도 0.5)
- 도지정 시범지역 : 총 6억원('07~'09, 매년 2억원)

라. 대상지역 현황

'07~'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리 도는 행복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사업아이템을 준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지역주민의지, 사업계획내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30개소중 13개소(27.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 국가지정 시범사업 : 7개소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흥(우산 Slow World), 강진(청자마을), 무안(하늘백련마을), 함평(나비연꽃마을), 완도(울모래마을), 진도(운림예술촌)

○ 도 지정 시범사업 : 6개소

- 광양(리버사이드 빌리지), 담양(전통음식고을 창평), 구례(산수유마을), 보성(다향마을), 해남(땅끝마을), 장성(축령산 휴 마을)

<표 2-4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별 대상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7	1	2	6	2	4	7	13	8	3	1
국가지정	30	1	2	3	2	2	3	7	6	3	1
도 지정	17	-	0	3	0	2	4	6	2	-	-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도시민유치담당 김영권, 담당자 손근식

3-2. 행복마을 조성

가. 추진배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상당수 노인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어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주택을 포함한 기초생활시설이 불량하거나 부족하여 도시민들은 물론 현주민들조차 생활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인구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전남 도내 빈집(08년 조사결과) : 12,911동(전체 농촌주택의 3.9%)
- 65세 이상 인구비율('05년말) : 15.6%(13개 군지역은 20% 초과)

따라서 전남도는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방안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은 한옥으로만 주택을 개량하고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 마을안길 확장 등 마을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하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민선 4기 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도정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06. 6월)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혁신국내에 행복마을과('06.8.28)를 신설하여 전남도 주요 시책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수, 전문가 등으로 「전략기획팀」을 가동하여 「기본계획서안」을 마련하고 2007. 3월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6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2007. 9월에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건이 좋은 마을을 찾아가 사랑방식대화(07년중) 30여회 가졌으며,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템 발굴 및 행복마을 뽕 조성을 위해 도지사, 목포대학교 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 등 주요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조성 국제심포지엄(07.11.2)을 개최했다.

2007년도 최초로 고흥 명천 등 5개의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을 지정하여 한옥 61동을 보급하고, 2008년도는 상반기('08. 4월)중에 신규단지 조성형 12개소를 행복마을로 지정하고, 이어서 하반기('08. 9월)에는 기존마을 정비형 12개를 지정하여 한옥 196동을 보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기존마을 정비형 22개소를 행복마을로 추가 지정하여 한옥 401동을 보급하였다.

또한 행복마을 소득사업을 민간 자율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사단법인 행복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행복마을 사무장 36명을 배정받아 행복마을협의회와 각 행복마을에 배치하고, 행복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9년 7월 한옥 76동으로 한옥민박사업을 실시하였다.

라. 향후 추진계획

행복마을 선정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여 우수한 마을을 지속적으로 행복마을로 선정해 나가는 한편, 튼튼한 한옥보급과 한옥산업육성을 위해 행복마을내 한옥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체를 지정하고,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 특산품판매 등 행복마을 주민소득 증대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한옥마을담당 방길현, 담당자 남두식

3-3.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주택건설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12>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 구(수)	667,962	758,147	692,287	661,821	769,040
주 택(수)	671,339	721,486	733,214	748,450	751,807
보급률(%)	100.5	99.12	105.91	113.08	99.51

앞으로 도민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질적수준 향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건설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13>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호 수	8,369	9,038	11,662	15,669	10,392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주택건축담당 김태형, 담당자 나승권

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 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6개 시군 127개 지구에 5,3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사업('01~'05)은 목포 등 5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 투자하여 05년까지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 확정된 2단계('05~'12)사업은 군 지역을 포함 16개 시·군 74지구에 3,11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8년까지 1,169억원을 투자하였고 '09년에는 32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도심미관 향상과 정비구역내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5,489억원의 개량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100,898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주택개량시 한옥주택건축을 널리 권장하고 있다.

<표 2-414>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까지		2010계획		2011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127지구	5,311	103지구	3,683	47지구 (42)지구	549	63지구 (44)지구	1,079
농어촌주택개량	100,898동	15,489	75,607동	11,156	1,374동	550	23,917동	3,783

※ ()내는 연차사업에 따른 중복지구임

<표 2-415>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거환경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지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 등 · 주택개량 : 주민자력개량(국민주택기금 융자) - 가구당 최고 4,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 연리 3%
농 어 촌 주택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4,000만원 융자금지원 -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 · 대출대상 주택 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 150㎡ 이하)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주택건축담당 김태형, 담당자 김지연, 김현경

3-4. 녹색농촌체험마을·전원마을 조성

가. 추진계획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 등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 20개 시군 44개마을에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02년부터 '09년도까지 총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4개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09년도까지 총 4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퇴농장, 체재형 주말농원,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등의 수요자 취향에 맞춘 환경친화적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표 2-416> 녹색농촌체험마을·전원마을 조성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17		520		197	
녹색농촌 체험마을	56마을	112	44마을	88	12마을	24	
전원마을 조성	40마을	605	29마을	432	11마을	173	신규 11 계속 29



3-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가. 추진계획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기반정비,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확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19개 시군 164개 면에 면당 30억원을 년차별 투자하여 살기좋은 농어촌 공간을 조성 쾌적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 도시민 농촌유입 등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추진성과

'90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한 정주권개발 사업은 총 5,2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반 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 하였으며, 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계획이 완료된 오지개발사업 분야도 '90년부터 '09년도까지 도내 16개 시군 6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5,027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등 3개 분야에 3,106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오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및 위치 선정과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을 제공하였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명예감독관 위촉 및 통합감리 시행으로 시공·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부시책사업 목적을 달성하였다.

<표 2-417>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0,903		10,303		600	
정주권개발	95면	5,876	95면	5,276	74면	600	
오지개발	3,106	5,027	3,106	5,027	오지종합개발사업종료(3차) (“10년 계획수립 추진)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 김윤영, 담당자 김지호

3-6. 오지개발사업

1990년부터 2009년도까지 도내 16개 시군 6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5,027 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등 3개 분야에 3,106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오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및 위치 선정과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감리 시행 및 명예감독관제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부시책사업 목적을 달성하였다.

<표 2-418>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억원)

전 체 계 획		추진실적						비 고
		계		2008까지		200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106	5,027	3,106	5,027	2,988	4,644	118	383	오지종합개발 사업 종료(3차) (‘10년계획수립)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 김윤영, 담당자 김지호

3-7. 소도읍 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상향식 공모제」를 채택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 지역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9년까지 30개 대상 읍 중 16개 읍을 선정하였으며, 2004년까지 선정된 8개 읍은 2007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 연도별 선정현황

- '03년 선정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 선정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 '05년 선정 : 곡성읍, 별교읍, 영암읍
- '06년 선정 : 담양읍
- '08년 선정 : 관산읍, 장성읍, 지도읍
- '09년 선정 : 진도읍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16개읍은 1읍당 국비 50억원과 도비 10.5억원('08년 이전 선정된 읍의 경우 국비 100억원, 도비 10.5억원)을 4년

에 걸쳐 분할지원 하게 되며, 16개읍 총사업비는 5,690억원으로 국비 1,393억원, 도비 185억원, 시군비 등 4,112억원이다.

2010년도에는 대상읍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콘텐츠(육성테마)를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 방법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419>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전체계획		추진 실적						2010년 추진계획	
		계		2008까지		200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0읍	8,000	12읍	5,186	15읍	4,563	8읍	623	5읍	537

※ '09년 8읍 중 7읍은 계속사업, 1읍은 신규사업, '10년 5읍은 계속사업, '10년도에 신규사업 4개읍 선정예정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한옥마을담당 방길현, 담당자 정인권

4. 재난재해 관리

4-1.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

가.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관리는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및 긴급구조·구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재난과 관련이 있는 38개기관·단체의 장으로 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04. 1. 1)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시장·군수)를 구성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재난의 효율적 관리

(1)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자연·인적재난 사고수습·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1개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구조·구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갖춘 92개 기관(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광역 지원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의료 등 국가기반체계

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효율적인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풍수해대책(방재과)
- 설해대책(방재과)
- 가뭄재난대책(방재과)
- 지진재난대책(방재과)
- 해일대책(방재과)
- 항공재난대책(도로교통과)
- 철도재난대책(도로교통과)
- 도로재난대책(도로교통과)
- 해상재난대책(해양항만과)
- 방시능방재대책(방재과)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대책(방호구조과)
-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환경산업과)
- 폭발·대형화재대책(방호구조과)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행복마을과)
- 통신재난대책(정보통신담당관실)
- 독극물·환경오염 사고대책(환경정책과)
- 산업재난대책(지역계획과)
-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문화예술과)
- 황사·폭염대책(방재과)
- 지하도상가 안전대책(방재과)
- 내수면 유·도선재난대책(방재과)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 환경산업과
- 정보통신(통신구) - 정보통신담당관실
- 교통수송(철도, 항공, 화물·대중교통, 도로, 항만)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 산업(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지역계획과, 기업유치과
- 의료보건(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보건한방과, 축정과
- 건설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시설) - 환경정책과
- 식·용수(식수, 용수) - 환경정책과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김정선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가. 주요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및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총 3,732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이 중 시설등급이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3,718), D, E급은 재난위험시설(14)로 구분 지정하여 계절·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과 위험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09년 4개소 57억, '10년 이후 14개소 179억)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속 전개

재난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위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소방 등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은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7,940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625개소 946건의 불안전 요인을 지적, 594개소 899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소 47건에 대하여는 정비중에 있다. ('96~'09년까지 : 95,475개소 점검, 12,421개소 22,338건 지적 안전조치 완료)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심홍식

4-3.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범도민 선진 안전의식 고취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분야별로 총 3,603개 기관 38,652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케이블TV 자막방송,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나. 각종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설·추석명절, 봄 행락철,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전기·화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4회 재래시장, 고속도로 T/G 등 다중이용시설·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녹색전남’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락객 및 도민의 생활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시민안전봉사자 선정 위촉 운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온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안전봉사자」를 선정 위촉하고, 또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상황과 접목한 재난안전 봉사활동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조기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민안전봉사자』 위촉 현황

- 위촉현황 : 총 3,648명(시·군별 100~455명)
- 구성원 분포 : 국민운동단체 510, 시민단체 330, 통·반장 1,026, 유관기관·단체 763, 전문기술자·종사자 215, 기타 804

라. 「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 실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고흥 거금도 연도교공사장 붕괴 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적·물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의 노후 가스·전기시설 정비, 재난피해에 따른 충격의 심리치료 및 자활지원 등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리 도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실련 등 전문기관 강사 3명을 초빙하여 공무원, 사업체 종사자, 도민 등 565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황재필

4-4.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 등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운용

재해취약지구 사전정비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5,50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아이티 수도 인근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10.1.12)하여 300 만명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 방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지진방재 도상훈련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수습 체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라. 신속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 상황 문자전광판 등 22개 시군에 17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 투입 순천시 등 20개 시군의 노후 강우량기 20대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 등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율방재역량 강화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도와 지역 군부대, 대한건설

기계협회에 이어 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인력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간 현장정보 확보를 위해 경남, 제주도 현지주민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광역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계곡 등 43개 지구를 선정지구 내 재해약자 대피를 현지 주민이 책임지는 E-30(30분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내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등 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방재복구담당 김장환, 담당자 임광건

바. 재해 예방·복구기능 강화

(1) 추진성과

재해 발생 우려가 많았던 재해위험지구 158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지 90지구에 3,209억원을 투입 69지구를 정비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89지구에 대하여는 2010년에는 32지구에 796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2,484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420>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단위 : 억원)

총 개 소 수		2009까지 정비		2010 정비		2011이후 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58	6,489	90	3,209	32	796	57	2,4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말목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6종과 구호물자, 의약품 등 10종을 확보하여 시·군에 비축 중이며, 불도저 등 동원장비 2,402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복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회 등 849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국가관리 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개수하천의 개수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며, 효율적인 개수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서 재해예방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방재복구담당 김장환, 담당자 이광열

4-5. 풍수해 피해 및 복구

가. 자연재해피해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50명(사망 46, 실종 4)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4,620억원으로 공공시설피해 8,208억원, 사유시설피해 6,412억원 이었다.

<표 2-421>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 (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중		
합 계	1,462,003	641,184	820,819	46	4	17,335	16,761
평 균	146,200	64,780	82,082	4.6	0.4	1,733	1,676
1999	126,513	81,511	45,002	8	-	3,177	1,771
2000	110,710	15,707	95,003	2	-	421	1,581
2001	6,629	5,504	1,125	1	-	1,704	51
2002	440,452	67,373	373,079	14	3	2,100	3,977
2003	278,483	175,196	103,287	11	1	4,563	3,843
2004	128,603	20,238	108,365	4	-	2,597	1,994
2005	249,160	244,358	4,792	4	-	2,435	142
2006	46,984	10,288	36,696	-	-	95	1,138
2007	73,451	19,981	53,470	3	-	243	2,264
2008	1,018	1,018	-	-	-	-	-

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1) 이재민 구호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구호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기 지정된 공동 수용시설이나 천막 등 임시 가건물에 질서 있게 수용하고, 취사 도구와 유류 등을 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 실시

재해발생 시에는 기 편성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들이 보관중인 수방자재와 지정된 장비를 동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 9월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 발생시에는 186천명의 복구인력과 2,839대의 복구 장비 동원,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복구단가 인상지원은 물론 재난지원금 선지

급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항구적인 개선복구 추진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조치하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 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422> 최근 10년간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 구 비 지 원						
		계	중 앙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국 고	의연금			
합 계	1,462,003	2,450,513	1,555,492	1,541,765	13,727	409,871	397,431	87,719
평균	146,200	245,051	155,549	154,177	1,373	40,987	39,743	8,772
1999	126,513	233,904	97,396	92,661	4,735	34,290	73,508	28,710
2000	110,710	287,094	214,836	213,429	1,407	49,160	17,010	6,088
2001	6,629	15,614	7,078	6,816	262	2,741	4,147	1,648
2002	440,452	800,985	596,94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2003	278,483	352,544	230,46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004	128,603	218,540	159,733	159,733		37,616	14,680	6,511
2005	249,160	331,277	104,234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2006	46,984	66,641	37,325	37,325	-	29,316	-	-
2007	73,451	143,914	107,481	107,481	-	36,433	-	-
2008	1,018	-	-	-	-	-	-	-

다. 추진 성과

최근 10년간 호우, 폭풍,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인명 피해 5명, 재산피해 1,462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에는 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서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방재복구담당 김장환, 담당자 임광건

4-6.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32.1km로 국가하천이 328km, 지방하천이 2,904.1km이다.

<표 2-423> 하 천 현 황

구 분	하천연장 (km)	요개수 연장(km)	2009까지 개수		장 래 (km)	관리주체
			km	%		
계	3,232.1	3,622.4	2,816.1	77.7	806.3	
국 가 하 천	328	345.9	341.4	98.7	4.5	국토해양부
지 방 하 천	2,904.1	3,276.5	2,474.7	75.5	801.8	도 지 사

하천정비는 요개수연장 3,622.4km중 지금까지 2,816.1km를 정비하여 7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요개수연장 345.9km중 341.4km(98.7%), 지방하천은 3,276.5km중 2,474.7km(75.5%)를 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 자연친화적인 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친변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레저·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하천담당 장정기, 담당자 장호훈

4-7.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전시설을 발견하고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안전 시설을 무상점검 한 후 보수방법 및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재난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점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건축물, 옹벽, 민간·공공시설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시설, 민원이 발생된 시설은 제외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양식 및 인터넷, 전화로 청구하면 해당 시·군에서 우리도로 청구하게 된다.

도에서는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별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도 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철근 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 13종을 활용하여 점검 한다.

다. 추진 실적

2007년 여수시 남면 마을회관 등 46건, 2008년도 32건의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 보수방법 등 해소방안 제공하였고 또한 점검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설동진,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김태곤

5. 토지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토지의 가치 창출

5-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열람 제공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 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 시 건전한 가격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지가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 소관주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그 결과 조사 인력 및 재정의 낭비는 물론,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결과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공적 지가에 대한 혼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토지 공개념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 1부터 보다 체계화된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다시 또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비과세 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 전체토지의 73%에 해당한다.

또 구조적으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9. 10. 27.~10. 28. 워크숍 개최,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운영, 위성영상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가조사 등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담당 운영진, 담당자 김옥남

5-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업도시, 특성화산단 등 대규모 국·도정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 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남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표 2-424>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m ²)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표 2-425>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09. 12. 31현재)

지	역	면적 (km ²)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 (지정자)
합 계		395.58	도 전체면적 (12,212)의 3.2%	15개 시군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0.38	'09. 12. 3~ '14. 12. 2	목포서산, 온금 재정비축진 지구 지정	도지사
여수시	오천동(1개동)	5.3	'09. 6. 10~ '10. 12. 9 (1년 6개월)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	도지사
여수시	경호동(1개동)	3.1	'07. 9. 25~ '12. 9. 24(5년)	경도종합개발 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 성산·선월리 중 경제자유구역 안의 지역(3개리)	6.7	'08. 4. 1~ '11. 3. 31(3년)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 조성	광양경 제청장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부	3.8	'09.7.8~'11.7.7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도지사

지역	면적 (km ²)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 (지정자)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3.6	'05. 11. 8~ '10. 11. 7(5년)	부도심확장 사업	도지사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개동, 3개리)	10.00	'08. 4. 9~ '10. 4. 8(2년)	미래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남평읍, 노안· 금천·산포면 일부)	39.6	'09. 5. 31~ '10. 5. 30(1년)	개발제한구역 투기방지	국토부 장 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개리)	7.4	'05. 9. 10~ '10. 9. 9(5년)	광양복합물류 단지 개발	광양경 제청장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 두정리(3개리)	5.4	'08. 9. 1~ '11. 8. 31(3년)	담양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곡성군	곡성읍 신기· 학정·장선· 읍내리(4개리)	19.6	'08. 11. 10~ '11. 11. 9(3년)	곡성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 신평리(3개리)	38.5	'08. 6. 18~ '10. 6. 17(2년)	고흥조선타운 개발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개리)	4.8	'08. 6. 18~ '10. 6. 17(2년)	남열리조트 개발	도지사
보성군	별교읍 마동리 (1개리)	8.7	'08. 11. 10~ '11. 11. 9(3년)	보성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장흥군	회진면 덕산·대리 (2개리)	5.1	'08. 11. 25~ '11. 11. 24(3년)	회진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성전면 명산· 수양·성전·도림· 금당·송학리(7개리)	26.3	'08. 6. 18~ '11. 6. 17(3년)	강진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해남군	산이면 대진·덕송· 구성·상공·부동· 금호리(6개리)	43.8	'09. 8. 21~ '11. 8. 20(2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도지사
무안군	무안읍, 청계· 망운·운남·현경면 (5개읍면)	97.6	'09. 3. 1~ '12. 2. 29(3년)	기업도시 건설	도지사

지역		면적 (km ²)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 (지정자)
함평군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 월야·월악리	13.5	'08. 6. 18~ '11. 6. 17(3년)	공동국가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신안군	압해면(11개리) ※ 고이·매화리 제외	52.4	'08. 10. 27~ '13. 10. 26(5년)	신안조선타운 건설 등	도지사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 담당 윤영진, 담당자 김양선

5-3.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있었을 뿐, 부동산개발로 인한 관리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육성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었다.

<표 2-426> 등록대상규모

건축물	연면적 2천m ² (연간5천m ²) 이상
주상 복합	2천m ² (연간 5천m ²)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토지	3천m ² (연간1만m ²) 이상

<표 2-427> 등록요건

구 분		등록 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는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표 2-428>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2009. 12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신 규	폐 업	비 고
업체수	28	34	6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최경주

5-4.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하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지적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47,348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6,418점을 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 도내 마을단 위마다 1내지 2점을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와 관련 구획정리,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의한 확정측량 23개 지구 3,468ha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 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358천 필지를 정확히 등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137천필에 대하여 등기를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5,480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영토, 영공, 영해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토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토보존과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굴뚝 없는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공사, 선도소프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권 국토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IS 기술교류 및 우호적인 협력 증진과 아울러 국토공간 정보 분야 기술자와 대학생에 대한 취업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승채

5-5. 지적 종합정보센터 운영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고품질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 공시지가, 소유권자료 등 각종 부동산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빠르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 종합정보센터는 '94년 행정자치부에서 설치 운영되었으며 도는 '96년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시·군 까지 온라인 개통하였다.

도내 토지정보 12,232km² 5,630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자료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자료 등 총 793천여 필지의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한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45,028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52,293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 각종세금 체납자, 벌과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226,062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415,518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555명이 신청하여 5,652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115천장의 지적(임야)도 DB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현재 전산 온라인발급 처리 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분할측량 등 측량민원으로 인한 지적측량결과도 111,873장을 DB구축하여 향후 사전 민원예방 및 도민 재산권보호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영신

5-6.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측량업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9년 12월 14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1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내 측량업등록은 총 1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2-429>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구 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업체수	128	44	84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여부,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임원 및 기술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진형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의 신속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연차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토지관리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최신성 도시계획DB 요구가 증대되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시간 기본 지리정보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도화추진 내용으로는 최신의 토지정보로 정비하여 국가 토지행정 업무를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토지행정 업무 및 공간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이다.

이는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가정책목표에 부응하여 한 차원 높은 토지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시스템과 연계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가격정보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열람 등의 각종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공간정보담당 신영균 담당자 조치영

5-8. 도로명주소 사업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된 토지지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과 도시팽창 및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나열됨으로써 우편배달, 방문 등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와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변경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 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법』이 2007. 4. 5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우리 도의 전체적인 업무량은 도로구간 13천개소, 도로명판 24천개소, 건물수 509천동, 세대별 새주소 확정 고지 110만건이며, 2009년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모든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었다.

앞으로는 도민이 바뀐 새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방문 고지할 계획이며, 주민등록부 등 7대 핵심장부를 우선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2011년말까지는 355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소전환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토록 하고, 모든 공적장부 정리가 마무리 되는 2012. 1월부터는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TV, 홍보영상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3, 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의 좋은점과 사용법 등을 등재하여 우리집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교육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주소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

상되고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는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생활양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공간정보담당 이평근, 담당자 박석호

5-9. 공간정보화사업

지표면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4. 5. 18일 GIS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일명 KOPSS)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발굴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통해 보다 완벽한 공간 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첨단 공간정보기술에 관한 학술발표와 정보교류를 통해 도내 공간정보화사업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라남도 GIS 컨퍼런스」를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9월 15일

을 “지리정보의 날”로 지정 「제1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행사를 시작으로, 2007. 9. 14 「제2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풍요로운 전남건설과 GIS 꿈)」, 2008. 10. 15 「제3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GIS와 함께하는 투자의 땅 전남)」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도가 자체 개발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참석자에게 선보였으며, 본 시스템은 투자예정지에 대한 각종 고시사항, 환경규제 사항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 도정의 운명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가 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행사등을 통해 GIS 공감대 형성과 산·학·관 및 민간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최근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되는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을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건설 중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아름다운 영상을 활용한 위성영상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2004. 12월~2006. 8월) 완료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남도의 현장감 있는 천혜의 영상을 전국에 알리고자 위성영상 참여마당 시스템 (2006년)을 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하루평균 2,000~2,500명의 주민들이 찾는 인기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

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공간정보담당 신영균, 담당자 김수복

5-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정부에서는 1994. 12월과 1995.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하시설물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여 축척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된 시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에서 시범적으로 도로, 상수도과 하수도 시설물을 현장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수치화 하였고, 현재는 시지역까지 확대하여 목포시를 비롯한 5개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총 사업량 6,457km를 입력 완료하였다.

사업 완료로 도로상의 시설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공간정보담당 신영균, 담당자 조치영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6-1. 기본현황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북도에 위치(동경 126°26'12" ~ 127°06'07", 북위 34°40'16" ~ 35°29'01")한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의 추월산 자락인 가막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와 나주평야 등의 드넓은 들판을 거쳐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남해로 흐른다.

영산강 유역의 평균경사는 19.5%로서 비교한 완만하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상류부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전체 유역면적 3,455km²중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1,749km²와 1,161km²로 전체 유역면적의 85%, 도시지역이 242km²로 7%를 차지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등 1개 광역시, 2개 도, 3개시, 7개군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역내 인구는 총 1,779,417명으로 남자가 886,344명, 여자가 893,073명으로 여자가 6,729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2,456가구(가구당 약 3명)가 거주하고 있다.

<표 2-430> 영산강 주요현황

하 천	하천등급	유역면적 A(km ²)	유로연장 L(km)	하천연장 (km)	유역평균폭 A/L(km)	형상계수 A/L ²
영 산 강	국가	3,455	129.5	111.7	26.7	0.206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2. 사업개요

옛 청동기 시대에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자 역사·문화의 산증인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영산강이 그 동
안 침전물과 각종 폐수 등으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BOD 평균 3~5
급)되었고,

하천바닥에 높게 쌓인 퇴적토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표 2-431> 영산강유역 풍수해현황(1998~2007)

구 분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피해액 (억원)
영산강 유역	18	8,903	26,550	5,042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에 오염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길을 정비하여 홍수 등
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가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6-3. 추진성과

2004년 영산강 살리기 구상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영산강 프로
젝트 TF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
주·전남 영산강 수질개선 노력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사업 외에 친수공간 조성, 역사·
문화 복원 등을 포함한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 영산강 살리기 구상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계획의

반영에 노력하였다.

2008년 12월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4급을 단장으로 한 총 9명의 인원으로 영산강사업지원단을 발족(2009. 2)함으로써, 영산강 살리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3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9조 1,212억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국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표 2-432> 영산강 살리기 사업내역(본사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억원)		-	26,461	
국토부	소계		13,583	
	하도정비(준설)	0.3억m ³	2,184	
	보	2개소	1,835	
	생태하천 조성	130km	2,792	
	제방보강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 도로	220km	209	
	기타	-	2,166	
농림부	소계		13,866	
	농업용 저수지	23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24개소	483	

이는 유역면적당(km²) 사업비로는 4대강 중에서 제일 높고, 하천연장당(km) 사업비로도 낙동강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2-433> 4대강 사업비 비교

구 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A. 사업비(억원)	20,435	24,875	97,875	26,461
B. 유역면적(km ²)	25,954	9,912	23,384	3,468
C. 하천연장(km)	494	395	506	138
유역면적당 사업비(A/B)	0.79	2.51	4.19	7.63
하천연장당 사업비(A/C)	41.4	63.0	193.4	191.7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홍보물 방영, 캠페인, 인터뷰·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와 아울러 도민, 환경단체, 언론인, 학생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현장체험 행사(영산강 뱃길 탐사 등) 그리고 홍보물(팸플렛, 브로슈어 등) 등을 통하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세부사업내용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09년 말부터 영산강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착공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인 영산강이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산강 살리기 이렇게 한다!



건설방재국 영산강사업지원단장 김명우,
 기획홍보담당 고병주, 담당자 이종연

7. 공동혁신도시 건설

7-1.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가. 실무협의회 구성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개 이전기관의 실무팀장급 및 광주·전남 지원단, 나주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2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나. 운영상황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윤번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전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와 전남, 서울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다.

'06. 3월에 최초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는 기본구상 용역 추진상황,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녹지공간 확충,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상황 등에 대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기관이 요구한 '혁신도시 중심부에 이전기관 배치'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공공기관이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

되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갈 것이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담당 남두식, 담당자 최순희

7-2. 혁신도시 공사추진

가. 공사추진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입지선정에서 보상까지 숭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는 총 7,315천㎡를 9개 공구로 나누어 LH공사(42.6%), 광주도시공사(23.6%), 전남개발공사(33.6%)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두개(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상생발전의 역사적 기틀을 만들었으며 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16개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두 광역단체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나. 광역교통계획(진입도로)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역교통계획(진입도로)은 총 4개 노선 8.13km로 사업비 2,029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중인 2개 노선 중 1개노선 6.75km(나주역~혁신도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노선은 예산확보 중에 있다. 또한 시행사 구간인 2개 노선 1.38k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광역교통계획은 호남광역권내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킴으로써 혁신도시를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 “빛가람도시” 확정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브랜드화 및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명칭을 공모하여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가람도시”로 확정했다.

빛가람도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새 이름으로써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과 광주의 빛이 하나 되는 상생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담당 김광현,
담당자 박종환, 김철홍

7-3.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가. 이전기관 및 임직원 지원계획 수립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임직원들이 순조롭게 혁신도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환경 개선 등

36건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민이 하나 되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반 편성 운영

(1)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보상협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상협의회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07. 4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제1회 보상협의회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6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변 토지가격을 반영한 현실가 보상,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나주배 브랜드가치에 대한 보상, 공원묘지 조성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했다.

(2) 보상협의 전담반 편성·운영

보상협의 전담반을 편성하여 편입 지장물 조사 및 향후 보상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주민을 설득하면서 보상협의를 착수했다.

또한, 편입 주민들의 이주와 지원대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며

특히 이주민의 1회 방문으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의보상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지정, 공휴일에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는 등 보상협의 전담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00% 완료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다. 보상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안내서 제작 배부

혁신도시 조성지 내 토지, 건물 등 재산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들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상품 안내서(1,000부)를 제작·배부하여 단 1건의 금융사고 없이 보상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였다.

라. 혁신도시 원주민 지원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개정(08.1.18)으로 제 47조의 2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업체 및 이전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이주민의 직업전환훈련 희망자를 분야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조정, 중장비 등 12개 과정, 99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여 이주민의 재취업을 도왔다.

또한, 65세 이상 영세·고령 원주민을 위하여 금천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이주단지(26세대, 70명)를 조성하였고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금천면 월산지구와 산포면 신도지구 2개 지역에 자체주택단지를 조성하여 33세대를 입주시켰다.

아울러, 원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단법인 “빛가람”을 설립하여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이장 등에 참여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마.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문화탐방 실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해양경찰학교 포함)의 직원

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남도문화탐방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실시했다.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869명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초청하여 천연염색문화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명승·유적지 답사,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했다.

이러한 탐방행사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조속한 이전 분위기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담당 남두식,
담당자 최순희, 박성훈

7-4.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시설지원

가.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

(1)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해소, 일극 중심의 국토개선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주고, 국토 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성 있는 성장거점 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했다.

(2) 기본구상 개요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지역 일원
- 면 적 : 7,315천㎡(계획인구 : 5만명)

- 입주기관 :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등 16개 기관
- 기본구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개발기본구상(안)작성	- 개발수요분석 -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구상
개발수요분석	- 시설별 입지선호도 조사 및 개발 수요분석 - 적정규모 및 개발밀도 추정
산학연 유치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 지역 혁신체계 구축방안 및 파급효과 - 해외사례 검토

(3) 기본구상 내용

1) 개발 컨셉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Green-Energypia”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지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지원 테크노파크, 대학 R&D를 연관 배치했다.

혁신클러스터와 배후 주거벨트 조성으로 용도별 기능간 연계를 강화하여 상업기능의 선형배치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및 도시의 활력을 형성한다.

특히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배메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속의 푸른 생태공원을 조성, 녹지네트워크화 하였고 저수지, 중앙호수공원, 실개울을 잇는 수류순환망을 구축하여 빛가람도시만의 차별화된 특화도시를 컨셉으로 하였다.

2) 혁신도시 미래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한다.

3) 도시개발 규모

인구밀도는 인구규모와 함께 혁신도시 도시면적을 결정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주거지 인구밀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하다.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한다.

4) 산·학·연 유치 및 연계방안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을 유치하여 자생적인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는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가 필요하다.

※ 유치대상

- 지역전략 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분원
-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유도
- 대학, 연구 개발형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도시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대상을 구체화한 후 마케팅 대상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망 구축

저공해 교통수단이 혁신 중심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중심지구 순환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조성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간존중의 녹색교통체계를 마련한다.

광대역 통합 통신망을 기반으로 u-home, u-education 등 필요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생활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미래형 디지털 도시를 조성한다.

6) 앞으로 추진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행정구역 경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형, 지세 등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4대 특화도시(Blue, Green, Human Culture, network)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담당 김광현,
담당자 김옥남, 박종환, 김철홍

나. 개발예정지구 지정

(1) 지구지정 필요성

본 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전이 계획된 혁신도시 예정지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2) 지정현황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 면 적 : 7,315천m²(221만평)

지정제안	지구지정	비 고
7,575천m ²	7,315천m ²	감 26천m ²

- 용도지역 : 관리지역 4,949천m²(67.7%), 농림지역 2,366천m²(32.3%)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사 업 비 : 약 14,841억원
- 고 시 일 : 2006년 11월 23일

(3) 지구지정 효력

지구지정 고시일부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다.

행위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분할,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이 있다.

(4) 앞으로 추진계획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담당 김광현,
담당자 박종환, 김철홍